

■ 야권 후보 단일화 '물의 전쟁' 시작됐다

문-안, 방법·시기 놓고 '수싸움' 치열

박 "구결정치" "꿈수정치" 맹비난

야권 후보단일화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물의 전쟁'이 시작됐다. 후보단일화 방법과 시기 등을 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치열한 물 밑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시기를 놓고 안 후보는 대선 공약이 발표되는 오는 10일 이후,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정치 혁신과 공동정책 등 협의해야 안건이 많다는 점에서 공식 협상을 10일 이후 개시 하더라도 물 밑 접촉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선 방법을 놓고도 양 측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시작한 상황이다. 문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에 배심원제나 경선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배심원제는 미리 선정한 배심원단이 TV토론을 시청한 뒤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 후보 측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선 방식도 문 후보가 정당의 조직력을 갖고 있어 경선이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배심원제나 경선을 실시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 이를 시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안 후보 측이 오는 10일 이후, 단일화 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후보 등록 시기에 압박해 협상이 이뤄질수록 경선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이 경우 후보 간의 담판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로 단일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아져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한 안 후보가 유리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 측은 "단일화된 후보는 당적을 갖고 출마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할 정도로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안 후보가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불

임정당이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을 고스란히 안 후보 지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사실상 입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안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무당파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후보단일화를 전제 조건으로 양측이 대선 이후 세력을 합치는 형태의 신당 창당을 약속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야권 후보단일화가 공식화되면서 대선 구도는 기존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3각 구도에서 새누리

당 박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2파전으로 서서히 재편되는 양상이다.

당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31일 후보 단일화 논의 구조를 빗대 문재인 후보를 '구결 정치'로, 안철수 후보를 '꿈수 정치'라고 규정짓는 등 맹폭을 퍼붓고 있다.

반면, 문·안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을 고리로 박 후보를 '협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놓고 문·안 후보 간의 신경전도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선 정국이 미래 지향적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민주당당 박지민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NEXT SOCIETY 2013) 포럼'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연광뉴스

문-안, 복지·사법개혁 정책대결

문, 부자감세 없애고 기초노령연금 두배로 인상

안, 중수부 폐지·공수처 신설·기소배심제 도입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일 민주당과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31일 각각 복지정책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책경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복지비전 구상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별적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또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제공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을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

처) 신설,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법과 형사처벌 강화 등도 담았다.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대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토록 했다.

나아가 정치적 과정이 큰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관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및 부당 행사에는 국민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경제민주화·경기부양 '투트랙' 강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1일 "한 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운용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은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특강에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국내 성장잠재력 하락, 중국의 추격, 미국·유럽의 재정위기 등 3중고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 함께 상생·발전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믿는다"며 "국민 모두가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땅 흔들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다음 정부 5년간 예상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배양 노력도 아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국민의 삶을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 추진할 생각"이라며 "원칙이 바르진 자본주의"를 모델로 소개했다.

박 후보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힌 뒤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경제주체 간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지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 후보 사퇴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 수용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처리 제안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점한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정현 단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투표시간 연장문제와 대선후보 사퇴시 국고보조금 환수를 골자로 한 일명 "떡볶이법"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

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응적으로 수용했다"며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의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캠프, 김재원·정준길 복귀

문측 "국민 지탄 받을 것"

대선 국면에서 구설에 올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나카한 김재원 의원과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박근혜 캠프에 복귀했다.

정 전 공보위원은 지난 9월 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으로, 김재원

의원은 당 공동대변인으로 내정되자마자 취중 막말 논란으로 각각 공보위원직과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총괄간사로, 정 전 공보위원은 서울시장 지

역갈등해소제도와 본부장으로서 재기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근혜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과연 이 두 분이 국민행복, 깨끗한 선거를 추진할 인물인 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예시: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다들유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남사원모집

나이가 몇 살이건 어느 학교를 나왔건, 지난날 무슨 일을 했건,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안 일해주는 사람. 기회가 주어진다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르는 건 배우면서 해보겠다는 사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써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5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경매 NPL 물건 특수물건

실전경매 배우실 분
경매 물건에 투자하실 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